

안철수 “잼버리 후 정부 최고관계자 사과·책임 장관 해임해야”

“책임 묻고 대처 시 외국 소송·불만 잠재울 수 있어” ‘수도권 전멸’ 예측엔 “인물난 심각... 인재 영입해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9일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와 관련해 “잘 수습돼 아무런 피해 없이 (참가자들이) 귀국하게 되면 정부 최고 관계자가 사과하고 유감의 뜻을 표하는 게 국제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필요시 주무부처 장관의 해임도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날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전화 인터뷰에서 “책임은 대한민국에 있다. 전북 새만금에서 했지만 울림픽이 서울에서 열렸다고 서울에 책임이 있는 건 아니지 않나”라며 “잼버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주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행사들) 마친 다음에 철저히 감사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고,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장관을 해임해야 한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체계를 만드는 일이 그제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잼버리 대회를 주관한 여성가족부 등의 책임이 적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안 의원은 또 “우리나라가 엄중하게 사안을 보고 그에 대해 제대로 책임을 묻고 대처하는 모습을 보이면 외국에서도 여러 가지 소송의 여지나 불만을 어느 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 의원은 신평 변호사가 주장한 ‘수도권 총선 예측 여론조사 전멸’ 발언과 관련해 “심각한 위기다. 인물난이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역마다 인지도도 있고 국회의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 지난해 지방선거 때 지자체장으로 나와 대거 당선됐다”며 “대부분 국회의원이 민주당이다 보니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분이 그들과 대항해 싸우기 대단히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여러 여론조사를 보면 내년에 야당을 뽑겠다는 의견이 여당을 뽑겠다는 의견보다 작게는 10%에서 많게는 20%까지 차이나는 것”이라며 “이것이 고착화된 것이 적신호다. 새롭게 지원자를 공모하더라도 많지 않은 형

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원희룡 국토교통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 차출설에 대해 “차출해도 한계는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은 정말 좋은 인재는 본인이나 서서 하지 않고 직접 찾아서 부탁해야 한다. 제 경험상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며 “(총선까지) 8개월 남았다. 정말 시간이 없다. 당장 (인재 영입을)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합치 출마 권유설’에 대해서는 “지하철 연장 등 시간이 꽤 걸리는 일들을 약속했다. 그런 약속을 마다하고 2년도 안 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건 정치인의 도리가 아니다”라며 “지역을 합부로 옮기는 건 옳지 않다. 당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안 의원은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전 대표 등 당내 비주류 인사들의 포용 가능성에 대해 “일반론적으로는 다양한 목소리가 어우러져야 승리할 수 있다”면서도 “본인들 태도에 달려있다”고 밝혔다.

그는 “당에 비판할 때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당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경우, 다른 하나는 정말 미워서 실패하기를 바라는 경우”라며 “자기가 속한 당이 성공하기를 바라



예정어린 조인 내지 쓴소리를 한다면 같이 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내부 분란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공하기를 바라는 애정 어린 조언이 같이 가면 시너지가 날 수 있지만, 정말 실패하기를 바라다면 같이 갈 수 없다”며 “그런 것들에 대해 본인도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하고, 당도 그에 대해 제대로 정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미국으로 출국하는 안 의원은 “워싱턴D.C에서 존 불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고, 여러 싱크탱크에서 세미나들이 준비돼 있다”며 “스탠퍼드 법대에 있는 분들,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탈과 기업가 등을 불러 간다”고 밝혔다.

변용일 기자

지지도, 국민의힘 38.7%...민주당 34.4%

국민의힘 지지도가 38.7%를 기록해 더불어민주당을 4.3%포인트 앞섰다.

9일 뉴시스의 의뢰로 에이스리서치와 국민리서치그룹이 8월 6~7일 이틀간 실시한 8월 2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당지지도는 38.7%를 기록했다. 7월 4주차 조사에서 34.3%를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4.4%포인트(p) 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같은 기간 4.8%포인트 하락한 34.4%를 기록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는 무당층은 0.1%포인트 내린 20.9%를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서울에서 국민의힘 지지도가 41.5%, 민주당 지지도는 34.8%를 기록했다. 인천·경기 지역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각각 37.6%, 34.7%를 기록했다.

대전·충청·세종·강원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32.3%로 국민의힘(32.0%)을 근소하게 앞섰다. 광주·전라·제주에서는 민주당 40.9%, 국민의힘 33.1%를 기록했다. 대구·경북은 국민의힘 49.1%, 민주당 25.6%, 부산·울산·경남에서는 국민의힘 41.2%, 민주당 36.2%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4050세대에서 민주당이 앞섰고,

2030세대와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이 더 높았다.

20대는 국민의힘 40.6%, 민주당 28.7%를 기록했다. 30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각각 38.8%, 36.7%를 나타냈다.

40대는 민주당 지지도가 47.0%, 국민의힘 지지도는 23.0%로 집계됐다. 50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38.9%, 34.2%를 기록했다. 60대 이상에서는 국민의힘 지지도가 49.6%를 기록해 민주당 지지도(26.2%)를 크게 앞섰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지는 무선 무작위 생성 표집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 100%로 진행했고, 응답률은 2.1%를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및 에이스리서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오유나 기자

민주, ‘오염수 저지’ 유엔인권이사회 진정서 서명... “尹 못 맡겨”

“18일 한미일 정상회담...오염수 방류 최종 결정 임박” “윤 대통령 믿고 국민 안전 맡길 수 없는 긴박한 상황”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9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하기 위한 유엔인권이사회 진정서에 서명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유엔인권이사회에 오염수 관련 진정을 제기할 진정단도 모집할 계획이다.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진정서 서명식에서 “후쿠시마 총괄대책위를 중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익 포기과 일본 정부의 불가역적 행위를 저지하고자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를 통한 진정을 제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을 비롯해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 소속 의원 7명이 진정서에 서명했다.

우 의원은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번 달 하순에 해

양 방류하는 그런 방안으로 조울 중”이라며 “특히 오는 18일 미국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담 이후 구체적인 방류 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많다”고 진정서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그런데 윤 대통령이 19일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 정부에 오염수 방류를 사실상 허용해주는 외교 행보를 할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감과 불신이 팽배해지고 있다”며 “더 이상 윤 대통령을 믿고 국민과 바다의 안전을 맡길 수 없는 긴박한 상황까지 왔다고 인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인류 공동의 삶의 터전인 바다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국제사회 상식과 국제기구의 전문적인 절차를 통해 대응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과 일본은 공히 국제인권규약과 자유권선택의정서의 주요 체결 당사국”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유엔인권이사회 권고 결의시 준수 의무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가 일본 국가기관인 일본원자력위원회에 의한 국제해양법, 런던협정, 핵안전협정 등 국제 법규를 위반한 행위이므로 진정 절차를 통해 자연 환경과 인간 생명권에 대한 치명적 위협에 대해서 충분히 국제사회서 다룰 수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민주당은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국제적 인권 협약과 과학적 안전 기준에 위배되는 행위로 규정하고 유엔인권이사회 특별절차를 통해 진정을 제기하는 진정단 모집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제 사회의 상식과 우려를 바탕으로 인권이사회 진정을 통해 국제사회 여론을 조적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슬비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